

이덕일의 '역사의 창'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이 무엇이였기에?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 지명되자 이른바 강단사학계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그중 하나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주한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을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 의원을 비판하는 이른바 강단사학자들과 보수·진보 언론에 포진한 언론카르텔은 '정치가 학자들의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식으로만 비판하고 이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이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 원을 이른바 강단사학자 60여 명에게 주어 지도를 만들게 한 사업이다. 2008년부터 시작해 2015년에 완성해야 하는데, 지도 제작 측에서 3년 연장에 30억 원 추가 신청을 하면서 도종환 의원이 속해 있던 국회 동북아역사외국대책특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 것이었다. 특히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필자가 속해 있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 이 지도에 대한 분석을 부탁하기에 필자는 이 지도에 대한민국 정부 발행으로 나가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

다. 첫째 '한사군=한반도설'에 따라서 북한 강역을 모두 중국 영토로 표기했는데, 북한 위기 시에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고 '북한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다'라고 주장하면 한국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점령했다고 그렸다. 시진핑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런 역사 인식의 뿌리를 찾아보면 당연히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있다.

둘째 4세기에도 한반도 남부에 신라, 백제, 가야를 그리지 않았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추종한 것이다. 일제는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설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발명했는데, '동북아역사지도'는 이를 추종해 4세기 인태도 신라·백제·가야를 그리지 않은 것이었다. 셋째, 독도를 일관되게 누락시켰다.

대략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동북아특위에서 2015년 4월 필자와 지도 제작 측의 대표인 임 모 서울고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회를 가졌다. 이 진술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국회속기록에 생생하게 나와 있으니 생략하겠다. 다만 독도 문제는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임 모 교수는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은 '실수'이고 아직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후 5개월간의 수정 기한을 주었는데도 독도는 끝내 그려 오지 않았다.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 일본 영토라는 것이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진의 역사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의 과장이 아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이 지도 제작을 담당했던 배 모 연구위원이 논문과 잡지에 기고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각을 위하여', '문화과학' 42, 2005)"라고 썼다. 독도는 일본 것이라는

뜻이다.

필자는 2016년 7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최한 '요소 지역 조사와 현장토론회'라는데 참석해 동북아역사재단 최고위층으로부터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재단 최고위층이 5개월간의 수정 기간에 지도 제작 책임자들을 불러 '독도는 꼭 그려 놓아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지도니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와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끝내 그려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지도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른바 강단사학계의 논리고 이들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보수·진보 언론카르텔의 논리다. 필자가 이 카르텔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겪은 수모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 우리 스스로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순국선열들의 피로 되찾은 이 나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커피원장

초원복집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녹음을 했고 당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이를 대선 이틀 전 언론에 폭로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직 법무장관이 영남 표집결을 위해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안기부차장, 경찰청장등을 모아 놓고 이날 대회의 어휘 하나하나를 권력과 그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내뱉은 저열함의 극지였다.

그러나 대선 결과는? 놀랍게도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푼푼 뚫치는 효과가 나타났다. YS는 영남 68% 몰표를 받고 990만 표로 당선된다. 2위 DJ는 800만표, 3위 정주영은 380만표에 그쳤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초원복집사건과 영남 몰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작년 4월 13일 제 20대 총선. 세월호사건의 직접 피해자들이 사는 경기 안산단원 구과와 을구에서도 이상한 개표결과가 나왔다. 사고당시 총체적 구조 난맥상, 꽃다운 자녀들을 억울하게 잃은 부모들의 한을 생각하면 어느 곳보다 준열히 여당이 심판받으리라 예상되던 이 두 선거구에선 표차가 적기는 하나 모두 여당 후보가 당선 됐다. 안산단원 갑에선 39.3%로 새누리 김경연후보가, 을에선 38.1%로 새누리 박순자 후보가 당선됐다. 상식

을 가진 국민이라면 안산 단원구 지역 사람들의 투표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난달 치러진 대선의 지역별 개표결과를 놓고도 화제가 되는 곳이 있다. 바로 경북 성주와 김천이다. 두 곳 모두 사드배치 반대시위가 뜨거웠던 곳이다. 개표 결과는 놀랍게도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1위였다. 성주는 홍준표 56.2% 문 18.1%, 김천은 홍 48.0% 문 24.3%였다. 현직 주민들 사이에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모르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지역의 투표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투표는 늘 합리적인 결과만을 보여준 건 아니다. 투표는 고도의 이성적 판단력이 지배하기보다는 감정과 충동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25년 전 초원복집에서 김기춘이 한 말을 보자.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돈이 생기는 법이 생기나. 그말은 맞다. 그러나 안 해봐서 모른다. 장관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경북, 대구 사람들 심심하다. 30년간 대한민국을 휘두르다 놓게 되면 손해지곤해.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혜는 못 받아도 억울한 일 당하면 한타리 건너로 집권층이니가 피해는 안 당했는데, 피해 안

보는 것만 해도 중요한 일이지"

영남 패권주의를 이렇게 솔직하게 잘 표현한 말도 없었다.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는 비단 이 때 뿐만 아니라 잠으로 질기게도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지배해왔다. 이 때 깨진 것이 바로 지난 대선이었다.

압도적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대통령인가? 호남대통령인가? 문대통령은 TK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지지를 받았다. 생물학적으로 부산대통령일 수 있지만 이념적으로는 호남대통령이라고 해도 좋다. 당선 후 적극적으로 호남행보와 호남인재 등용 닦인지 문대통령에 대한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호남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호남사람들의 그에 대한 지지가 '호남사람 잘해줘서'라면 25년 전 부산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그의 철학, 그의 정책, 그의 노력을 보고 던지는 지지와 환호가 진짜 지지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는 매서운 비판도 던질 줄 알아야 한다. 그에 호응하는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호남인재들이 속속 증용되면서 주변엔 어떻게 덕 좀 보려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띈다. 찬물 마시는 것이 좋다. 안 그렇다면 김기춘씨 말따라나 한타리 건너 권력덕 좀 보려던 25년전 영남 패권세력들과 다를 게 없다.

기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바란다



권욱 전남도의회 부의장

위기까지 해결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보여 주었던 차별이나 역차별 인사 그리고 정책의 흠때문에 우리 지역이 받은 낙후는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먼저, 국정 운영 방향으로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 이 총리는 지사 시절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100원 효도 택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농어촌 교통복지의 모범사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100원 택시'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전남도의원과 언론인들과도 '막걸리 대화'를 했고 직원들과는 계급을 타파한 '섞어 번개팅'을 하며 상하로 경직된 공직사회를 격의 없이 친근하게 소통했었다.

이낙연 총리다운 행보였다. 100원 택시와 같은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을 섬기고 막걸리 대화로 소통하는 어머니와 같은 친근한 총리가 되어 주길 바란다.

다음은 그동안 흠대받아온 호남군 출신들의 인사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중앙부처에는 호남 출신 장·차

관은 볼 수 없고 주요 부처 실국장 과장급까지 씨가 말랐다.

특히 정부 부처의 주요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책임자급인 서기관, 부이사관의 수가 급감하면서 광주시·전남도가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봉쇄됐다. 호남 출세의 영남 편중 인사가 지속되면서, 간부 직원들을 이끌어주던 지역 출신 장·차관이 사라지고 간부급 공무원은 외곽 비 선호부처에서 머물고 있어 지역의 정책이나 예산지원 요구를 받아 줄 수가 없다.

이 총리도 지사 시절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외곽에서 전전하고 있는 호남 출신들의 인재 등용이 시급하다. 또한, 호남에서 배출된 유능한 지역 인재를 중앙부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은 사람이 하기에, 인사가 만사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정이 안정되어 있기에 호남의 대중합이 필요한 시기인 비상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국무총리는 그 어느 총리의 역할보다 중요하고 소임도 책임총리로서 어느 총리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기차 출신에 4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이낙연 총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는 매우 높다. 이 가운데 이 총리는 호남 총리로 낙점받았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당시 받아왔던 호남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이는 호남이 그동안 인사차별과 정책 소홀을 받아온 사실이 이 총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호남이 또다시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만 인재 등용에서 대 당평등을 꾀하는 평가를 받고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힘을 썼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경륜과 능력으로 호남 총리라는 수석어를 넘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국민대 통합형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국민 대통합이라는 국정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 지사가 총리로 인준된 후 지역 민심은 본인이 누구보다 호남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호남에 대한 인사와 예산, 정책 지원을 잘 살피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책임총리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명백한 총리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을 지키는 첫 총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社說

지방분권 개헌 이번엔 반드시 실현시키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17개 광역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비급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정부의 폐단을 낫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1961년 5·16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는 1991년 30년 만에 부활했으나 실질적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된다. 여야 정치권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방분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시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다시 강조하고 확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개헌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지방분권 부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

옛 전남 도청 원형 복원 각계 지혜 모아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된 옛 전남 도청을 80년 광주항쟁 당시 모습으로 원형 복원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최근 옛 전남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옛 전남 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옛 전남 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발표한 옛 전남 도청의 '5월 모습으로 원형복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시가 옛 전남 도청 복원을 두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주시의 공식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5·18 37주년 기념사에서 옛 전남 도청 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우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문화부 장관을 면담하고 복원 범위, 복원 사업 추진 절차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옛 전남 도청 복원·보존 자료 조사 관련 TF를 구성하고 평면·내년 사업 예산 확보에 나

설 방침이다. 하지만 옛 전남 도청을 원형복원하기까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복원에 따른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시콘텐츠 존폐와 그로 인한 문화전당의 운영 문제는 말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도청 민원실 등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의 경우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시킨 콘텐츠를 상설 전시하기 위해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역량을 쏟았다.

옛 전남 도청은 5·18 항쟁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1980년 '그날'의 모습을 최대한 되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평화교류원으로 상당 부분 변형이 된 터라 복원 과정에서 예산을 비롯한 예상되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광주시는 대책위를 비롯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원형 복원은 물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언젠가 광주의 한 커피숍에 갔을 때 벽에 나란히 붙여 있던 '감' 모양의 메모지를 본 적이 있다. 메모지에는 누군가를 위해 미리 커피 값을 낸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지인에게 또는 폐지 줍는 할머니나 집배원에게 음료를 드린다는 글도 있었다.

이른바 '까치밥 홍시' 프로젝트인데, 김남주 시인의 시 '찬서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 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어('옛 마을을 지나며' 중)에서 이름을 따왔다. '까치밥 홍시'는 조상들이 겨울을 앞두고 굶주린 까치를 감나무에 남겨 두던 따뜻한 마음처럼 미리 계산해 두는 '나눔 운동'이다.

흔히 서스펜디드 커피(Suspended Coffee)로 불리는 '나눔 커피'는 100년 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된 카페 스페소(Caffe Sospeso)에서 유래했다. 돈이 없어 커피를 사 먹지 못하는 노숙자나 이웃을 위해 미리 돈을 내고 맡겨 두는 커피다. 이 운동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됐고 국내에선 '미리내 가게'와 '콩 반죽 나눔가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 '서서평 커피'가 등장했

다. 양림동 일원에서 복합 문화축제 '양림살롱 1930'(마지막 주 수요일)을 진행하는 주스컴퍼니가 지난달 시작한 기획이다. 커피 이름은 제중원 간호사로 일하며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자 등 가난한 이들의 오랜 벗이었던 서서평(E. J. Shepping, 1880~1934) 선 교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서서평 커피'는 관광객들에게 일상 공간을 내어 줌으로써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하는 작은 나눔이다. 축제

참가자들은 탐블러를 5000원에 구매할 경우 양림동 카페 음료권 '살롱페이' 3장을

받게 된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페이를 카페에 기부하면 양림동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방식이다. 매달 살롱페이 구입자는 약 250~300명 정도로 지난달 '서서평 커피'로 기부된 건 40장이었다.

관광 명소로 부상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은 오래된 숙제다. 감천마을은 수익금으로 동네 목욕탕을 만들었고 동리마을은 쌀과 연탄 등을 나누고 있다. 양림동에선 그윽한 커피 한 잔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셈이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